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는 25일 오전 의장실에서 시의원과 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예산편성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난항’

## 한나라 “지방세수 부족분 국세로 보전해야”

한나라당은 25일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취득등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해법을 논의, 찬반 토론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진통이 예상되며,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최종 방향이 결정

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행정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차명진 의원은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게 된다’며 거래세 인하에 반대한 반면 고흥길 의원은 무조건 통과를 주장하는 등 찬반이 엇갈렸다”면서 “권경석 의원은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세로 해 지자체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는 “거래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부분

에 대해 중앙정부의 1회 보전이 아니라 국세로 보전하는 식의 장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 방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지자체 세수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애초 여야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9월초 고지서 발부에 큰 착오가 생기고, 행정상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